

서울시-SH公 3900억 투입, 송파·강동에 新콤팩트시티

(공공주택·주택여가·일자리 집약 공간)

장지·강일 버스차고지 입체화 사업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주택 1805호 차고지 상부의 절반을 공개 녹지로 공사기간에도 버스운행 변동 없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버스차고지가 공공주택, 생활SOC, 공원이 결합된 콤팩트시티로 거듭난다. 콤팩트시티란 저이용 공공부지를 개발해 주거·여가·일자리가 집약된 도시공간 구조로 만드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장지·강일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비로 약 3900억원이 투입된다.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동 682번지(3만3855㎡)에 청년·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1805호(장지동 840호·강일동 965호)가 들어선다.



강일 버스차고지 콤팩트시티 상상도.

/서울시

SH공사의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청신호'를 적용해 기존보다 1평 더 큰 공간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에는 몸만 들어오면 되는 빌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

방과 같은 공유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차고지 상부 공간의 절반 이상을 공개 녹지로 꾸민다. 휴식, 여가, 놀이,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테마형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

께 도서관, 체육시설, 창업·일자리 시설, 판매 시설 등 생활SOC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역은 버스시·중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시 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마연, 빛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버스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능형 CCTV 등 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버스시·중점에 승·하차장과 대합실, 육아 수유공간을 설치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보관·충전시설을 확보해 사람이 모이는 환승 거점으로 만든다. 버스차고지가 단순히 버스가 나가고 들어가는 공간을 넘어 일종의 '버스터미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장지 차고지, 내년 3월 중 강일 차고지에 대한 국제현상설계공모

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설계안을 채택하고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입주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차고지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임시차고지를 운영한다. 버스 운행에는 변동이 없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기존 버스차고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입체화를 통해 부족한 기능을 보완,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장지동, 강일동 차고지 부지 일대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택에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콤팩트시티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 가을 A형 인플루엔자 첫 검출 "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서둘러야"

경기도 바이러스 확산 전 대응 당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A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A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해(38주차)보다 7주 늦은 11월 첫째 주 김포의 한 병원을 찾은 호흡기 질환자에 게서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늦게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도 45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만큼 바이러스 검출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A(H1N1)pdm09형'으로 매년 유행하는 독감

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을 보인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취약계층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전통시장 화재걱정 '뚝'... 패키지 보험 지원

경기도 기존 화재공제보다 반가량 저렴 보상한도1억 책정, 재기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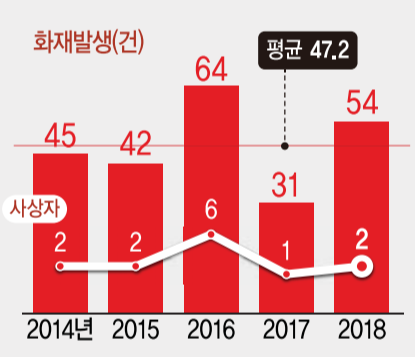
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행정안전부

2014~2018년 전통시장 화재발생 총 236건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초록미래학교 9곳 선정

환경교육 지원금 3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우수한 환경교육 모델을 선보인 시내 초·중·고교 9곳을 '초록미래학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록미래학교는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교육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중랑구 면동초등학교 ▲마포구 신북초등학교 ▲서대문구 대신초등학교 ▲강남구 개일초등학교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중구 창덕여자중학교 ▲은평구 예일여자중학교 ▲구로구 신도림고등학교 ▲노원구 청원고등학교 등이다. 시는 초록미래학교에 환경교육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면동초등학교 모내기 활동 모습.

/서울시

이들 학교는 벼농사 프로젝트, 목화 실 뽑기, 1인 1식물 가꾸기 등의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는 초록미래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기후위기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자격증없이 부동산 중개...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불법 중개·사칭 등 적발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남·71)는 A씨(여·71)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인장,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을 소개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다. 계약을 할 때는 A씨의 명의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이 적발됐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 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2명도 달미를 잡혔

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 놓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